

| 10일 Market Index | | | |
|------------------|----------|-------------|---------|
| ↑ 코스피 | 2570.39 | ↓ 코스닥 | 725.82 |
| | (+6.91) | | (-1.88) |
| ↓ 금리 (연율) | 2.596 | ↓ 환율 (원/달러) | 1453.30 |
| | (+0.031) | | (+6.50) |

연체 눈덩이 자영업자 ‘곡소리’... 여야는 ‘땀질처방’만

폐업공화국 위기

지지부진 추경 논의

고금리에 내수침체 길어져 연체 개인사업자 35% 증가
 韓 자영업자 비중 OECD 5위

여야 현금 풀고, 세금 깎고
 단기적 포퓰리즘 정책 급급



10일 서울 서대문구 이대입구역 인근 상가가 공실로 방치돼 있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내수 부진 등 경기 침체 영향으로 지난 1월 국내 자영업자 수가 550만명으로 전월보다 7만4000명(1.33%) 감소해 지난 2023년 1월(549만9000명) 이후 2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보였다. /뉴시스

거리가 한산하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 고금리 환경과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으로 소비 위축 심리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소비가 위축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자영업자들이다. 자영업자들이 사라지면 우리나라의 노동가능 인구의 상당수가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된다.

고금리 환경에서 내수침체가 길어지자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났다. 10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중 금융기관에 진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이들은 1년 전보다 35% 증가한 15만5060명이었다. 이들이 벌린 후 갚지 못하고 있는 대출 규모는 총 30조7248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전체 취업자의 23.2%에 달한다는 것이다. 2024년 9월 기준

국민의힘은 지난 4월 760만명에 이르는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에너지 공과금 바우처 및 200만원 상당 시설·장비 구입 바우처 지원 등을 지원하겠다고 예산이 3조원 정도 들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만큼 더 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수퍼 추경’ 대신 ‘핀셋 추경’을 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핀셋 추경’을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지역화폐 지급,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지원을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달달 13일 자체 추경안을 공개한 바 있다. 민주당 자체 추경안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직접 지원하는 예산과 소비 진작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13조1000억원) ▲상생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바우처 ▲지역화폐 할인지원(2조원) 등의 예산이 담겨 있다.

정부는 2025년 예산의 67%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내수 회복·물가 안정·경기 부양 등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을 중심으로 집행할 방침이다. <2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금융위기 때 보다 더 힘들다’ 자영업자 두달새 20만명 폐업

1월 기준 자영업자 550만명
 재료비·인건비·임차료 부담

경기 침체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폐업 결정을 내린 자영업자 수가 최근 2개월간 20만명 넘게 늘었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자영업자는 55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3년 1월 이후 가장 적다.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11월 570만명에서 20만명 이상 줄었다.

연도별로 보면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590만명)과 1998년(561만명),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600만명)과 2009년(574만명)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2009년부터 500만명대로 줄어든 자영업자는 줄곧 560만~570만명 수준을 유지하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550만명대까지 감소했다. 이후 엔데믹 직전인 2023년 1월 549만명까지 줄어든 뒤 회복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말 다시 급감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원자재·재료비(22.2%), 인건비(21.2%), 임차료(18.7%), 대출상환 원리금(14.2%) 순으로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다.

1년 전보다 순이익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28.0%에 불과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社告

**메트로경제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힘든세상,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메트로신문이 오는 3월25일(화)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을 개최합니다.

저성장 지속과 내수(소비+투자) 부진으로 국내외 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경제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잃어가는 난세(亂世·힘든 세상)에 직면해 있습니다. 100세시대 현실화로 확실한 재테크 전략이 절실합니다.

메트로신문은 ‘난세(亂世)의 소확재(小確財)-힘든 세상,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를 주제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국내외 경제와 주식시장을 전망하고, 고령화시대 재테크, 증·상속세 절감, 부동산 투자 전략 등을 모색합니다.

- ◆ 행사명 : 2025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시즌1)
- ◆ 주 제 : 난세(亂世)의 소확재(小確財)
 -힘든 세상,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 ◆ 일 시 : 3월 25일(화) 오후 2시~5시10분
 (VIP 티타임 오후 1시30분~2시)
- ◆ 장 소 :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 문 의 : 100세포럼 사무국 (02)721-9826,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metro®

韓, 車생산 7위로 하락... 美 관세로 10위도 불안

KAMA, 車생산 현황 보고서 내수한계·경쟁심화 등 영향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규모가 내수 부진으로 2023년 세계 5위에서 지난해에 7위로 내려앉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10일 발표한 ‘2024년 세계 자동차 생산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자동차 생산은 전년 대비 0.5% 감소한 9395만대로,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생산 급감(-15.4%) 이후 처음으로 글로벌 생산 감소는 도요타,

혼다 등의 품질 인증 문제가 벌어진 일본(-8.5%)의 생산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아울러 태국(-20.0%), 스페인(-3.0%), 한국(-2.7%) 등도 생산이 줄었다.

특히 국내 자동차 생산은 전년 대비 2.7% 감소한 413만대를 기록해 글로벌 7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대수는 증가(0.6%)했지만 내수 판매가 2013년 이후 최저치인 163만5000여대(-6.5%)로 떨어지면서 생산 규모가 줄었다.

지난해 세계 자동차 생산규모는 중국(3128만대)이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미국(1056만대),

일본(823.5만대), 인도(601.5만대), 독일(442.5만대), 멕시코(420.3만대)가 우리나라보다 상위 생산국에 올랐다. 특히 ‘톱4’ 국가들의 생산은 글로벌 전체 자동차 생산의 59.7%를 차지했다. 중국은 정부 주도의 내수 진작책과 수출 장려 정책이 연계되면서 16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KAMA는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내수 한계와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자동차 시장은 잠재 수요가 적어 올해 내수가 전년 대비 회복세를 보이더라도 생산 확대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 올해 중국 업계의 세계 시장 지배력 강화와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은 수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은 완성차 기업을 포함한 국내 제조 기업들의 해외 생산과 투자 확대를 가속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경쟁력 약화로 글로벌 ‘톱10’ 생산국에서 밀려날 수 있다며 이는 부품 등 전후방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양성운 기자 ysw@

메트로 韓줄뉴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하늘이법 국회 통과 등 노력하겠다”
 ▲ 박찬대 “사퇴 거부 심우정,尹정부 검찰총장다 위... 책임 묻겠다” /사진 뉴시스

▲ 감사원, 상반기 중 공군본부 정기감사... 오폭 사고 직접 조사는 안 해
 ▲ 김상훈 의원 “대구 염색산단 잇단 폐수 유출 철저 조사할”

▲ 與김장겸, ‘포털뉴스 공적책임법’ 발의... “포털, 뉴스 유통 책임 강화”
 ▲ 민주당 “극우세력, 현재 계사판서 불법 매크로로 여론 조작”